

이재명, ‘국정협약체’ 제안... 정부 “협력”·與 “거절”

李 “국정 안정·국제신뢰 회복”
“한덕수 탄핵은 추진 않기로”
“추경, AI·지역화폐 예산 확보”
정부 “여야 국회와 협력 준비”
권성동 “국힘이 여전히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약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이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만큼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혼란을 수습하면서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 △중단된 국제사회의 대화·협력 복원 노력 △한미 동맹 확장 발전·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스

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가동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울러 전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 “거부권 행사는 여야간의 정책적이고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에 그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그 원칙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으로 ‘AI(인공지능)·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모두가 인정하듯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

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 (해소)”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추경을 한다면 (대상 항목은) 정부가 심각하게 줄였거나 없앤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예산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매우 적절하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야당도 이에 협력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마치 탄핵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고위당정협의회든 실무당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여, ‘한동훈 지도부’ 붕괴...계파 대결 양상

비대위원장 두고 주도권 다툼
한 대표, 오늘중 입장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모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 5개월 만에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15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탄핵안 표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민전·인요한·장동혁·진중오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후 사퇴 의사를 전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참담하다. 무면도강(일에 실패해 고향에 돌아갈 면목이 없다)으로 대신한다”며 “차기 지도부 체제는 월요일(16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올해 7월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 체제는 막을 내리고,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 당론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제가 당론으로 투표를 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총장 분위기는 격양됐고, 한 대표는 의총장을 나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

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한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한 대표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대위가 구성이 된 이후에 당대표 권한도 상실된다는 것이다.

비대위원장 임명을 두고 한 대표 측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윤(친윤석열)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당대표 궐위 시에는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은 “당대표는 아직 사퇴하지 않았으므로 당대표 권한대행은 성립될 수 없다”며 “벌써부터 당권 확보에 골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길 권 원내대표에게 부탁드린다”고 직격했다.

정치권에서 한 대표의 사퇴 여부는 친한계와 친윤계의 계파 갈등을 넘어 당 해계모니 싸움으로 비화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의 거취를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 공보실은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16일 향후 지도부 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한 대표도 짐목을 이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시작

정진석 비서실장 업무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 둘째 날인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모든 (대통령실)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했다”며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대통령이 주재해 온 수석비서관회의 등 주요 회의를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민생 정책과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상황 등에 관해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고건·황교안 이어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한대행 체제

고, 외교·안보·치안 등에 무게
항, 인사권 등 적극 권한 행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한대행 체제가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국무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민주화 이후 첫 권한대행 체제가 발동된 것은 참여정부 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문제 삼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다. 2004년 3월12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고 권한대행 체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같은해 5월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까지 2개월 2일, 63일간 가동됐다. 이 기간 노 전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공식 일정을 갖지 않았다.

고 권한대행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외교·안보·치안 등 대내외적 상황 관리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직무가 정지됐던 데다가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당시 분위기 등을 고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권한대행 기간에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주한대사로 부터 신임장을 제정받기 위해서였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도 주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권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하는 정도로 행사했다.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총리가 2016년 12월9일부터 제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2017년 5월10일까지 약 5개월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다.

정 실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비서실은 권한대행을 보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 협조 문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협의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오케이”라고 답했다.

다만 한 총리는 특검법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이라며 “크게 정식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황 권한대행은 고 권한대행에 비해 이양된 권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4년차에서 5년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권한대행을 맡았고, 탄핵안이 현재에서 인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권한대행 기간이 길었던 데다가 대선까지 치른 만큼 적극적 권한 행사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는 않았다.

황 권한대행은 설맞이 가색방을 확대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당시 모범수형자, 중소기업인, 생계형범죄자 등 884명이 가색방됐는데, 이는 2009년 6월 이후 최대 규모의 가색방이었다.

황 권한대행은 인사권도 적극 행사했다. 당시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친박’으로 분류되던 인사를 정부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뉴스스